

## ‘상호시장 개방 제도 시행’ 문제 해결 미룰 일 아니다

김순환 | 문화일보 기자(soon@munhwa.com)

정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선진화의 주요 쟁점들이 대형사와 소형건설사, 업종 상호 간의 다툼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으로 추진했던 ‘업역 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 등이 건설산업 합리화보다 과당경쟁과 소규모 업체의 피해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역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을 하자 중소기업에 종합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면서 전문 건설업체의 수주액이 오히려 줄어든 현상을 빚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건설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후 전문업체들의 수주액은 급감했다. 지난해 전문 공공 공사 발주액 11조6701억 원(8만4599건) 중 종합건설업체가 9689억 원(3081건)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35조8182억 원(2만854건)이 발주됐으나 전문건설업체 수주액은 2785억 원(646건)에 불과했다. 업종 개편 전과 후로 따지면 약 7000억 원을 종합건설업체가 더 수주해 간 것이다.

이에 따라 업역폐지와 상호시장 개방 제도를 시행해 본 1년간 생존 위기에 처한 업체들이 급증했다는 게 전문건설업체의 주장이다. 업역 규제 폐지로 수주액 증가를 기대했던 전문건설업체 등 중소·중견 건설사들 입장에서 오히려 일감을 더 내준 꼴이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해 온 건설산업 선진화가 오히려 일감 불균형을 심화시킨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건설 업역 간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현실화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은 올해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업역폐지와 상호시장 개방 제도를 개선해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 상호시장 개방, 전문시공력이 필요한 분야 분리발주 활성화,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사전 적격 심사제도 시행, 불합리한 하도급 제한·하자 담보책임제도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건설단체는 올해 들어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월과 3월 기자회견과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 등을 열어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단체들은 4월 중순에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방치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계의 건설산업의 질적 향상과 각종 공사 수주 활성화를 통한 상호 생존권 보전과 질 좋은 건설 서비스 등에서 시작됐다. 업역폐지와 시장 개방을 통해 협력과 경쟁으로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없는 건설 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돼온 건설산업의 각종 문제점을 고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와 건설업계의 의도와 달리 공공과 민간 발주공사의 종합건설업체 수주 쏠림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낳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극심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종합·전문건설업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간 업역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 등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이 조기에 수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선과 의지 없이는 종합·전문건설업계가 합의한 '합리적 대안(代案)'을 내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법안인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합의가 필요하다.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의 피해를 직접 입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업역 문제와 입찰제한 문제 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행 규칙과 조례 등의 개정만으로 건설공사 수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건설업계가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종합·전문업체 간의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대형·종합건설업체에 유리한 현행 낙찰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은 정부와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사실상의 합의와 수궁 속에 시행됐다. 정부가 '법 시행 초기의 혼선', '시행해 본 후 문제점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협력과 합의로 도출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업역폐지나 상호시장 개방 문제는 정부는 물론 종합건설업체가 수용해야 조기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피해액 증가'나 '생존권 위협' 등의 주장으로는 정부나 국민에게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를 안고 있다. 전문건설업계가 집회 등 물리적 실력행사와 병행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이유다.

다만 ‘건설산업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설산업 선진화가 어떤 한쪽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결국 ‘건설 안전사고’, ‘공사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설산업을 지배해 온 후진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낳은 병폐인 부실공사와 각종 사고 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모순이 사라지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폐해를 ‘문제점 개선’ 등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종합 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지속할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는 점을 유념하고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정책의 초점은 국민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의 근간인 국민 편익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어느 산업 분야도 단연 앞서는 것이 건설산업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건설산업 선진화와 건설업 생산성 혁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주거와 인프라 시설 건설 과정의 완벽한 시공과 관리가 국민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건설업계 모두 건설 생산성 혁신, 건설 비용 절감, 건설산업 합리화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에 대한 ‘질 높은 건설 서비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